

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생산성 향상 담보돼야



농수축산신문 2021년 9월 8일자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축산업이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적되면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사료 등 기술 개발이 주요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왜 우리는 저메탄사료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료를 소화하고 분뇨를 배출하는 주체인 소(한육우, 젖소)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는 장기간 국내 사육 여건과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개량됐다.

국내 순수혈통인 한우는 타국의 비육우와 비교는 어렵지만 마리당 소고기 생산량은 30여 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1등급 출현율은 73.4%로 향상됐다. 홀스타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젖소는 마리당 산유량이 1989년 5458kg에서 2019년 9547kg으로 30년간 1.7배 향상됐으며, 이를 통해 사육 마릿수를 감축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종축을 비롯한 가축개량에 의한 것이며 국내 사료 급여 체계, 사양기술 변화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성과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과 기술에 대한 검토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그 중 저메탄사료 급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의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의 흡수율 등에는 차이가 있으며 저메탄사료 급여에 따른 효과도 소 개체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메탄사료 급여에 적합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종축의 선발과

가축개량이 뒷받침된다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축산업 경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아미노산균형 개선사료 개발과 더불어 저메탄생성소의 개량·육종에 대한 연구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비육기간 단축, 폐사율 감소, 사양기술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축산업의 생산성 유지와 향상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가축개량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가축개량목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3호)’에는 한우와 젖소 등 가축의 생산성과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목표들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가축개량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축개량목표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난 30여 년간 가축개량을 통해 양적·질적인 성과를 나타냈듯이, 앞으로도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담보로 한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